

보험업계, 종지업 진출 시큰둥… “활용법·수익성 제한적”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라이선스 허가를 시사했지만 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보험사가 종지업에 진출해도 한계가 뚜렷해 수익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해소를 위해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종지업 허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업무영역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종지업이란 ‘계좌 개설권’으로도 불린다. 은행 이외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좌 개설 권한을 부여해 간편결제, 송금 등 전자금융업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납입, 청구 등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정작 보험업계는 종지업 허가 가능성

당국 허가 시사에도 회의적 반응
“계좌 통한 예대마진 기대 어려워”

수백억 단위 초기투자비용 걸림돌
보험사 규모에 따른 양극화 우려도

/유토이미지

에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결제업무와 밀접한 카드사의 경우 리워드 혜택 강화 등 경쟁력 제고의 여지가 있지만 보험업의 경우 활용방안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초기 개발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마땅한 활용방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종지업은 계좌 개설을 통한 송금, 이체 기능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계좌를 통해 수신한 자금을 운용하거나 예대마진을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보험금 수령 및 납부 이외의 기능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초기투자비용 또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종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자

금융결제 시스템 구축은 물론 결제망, 보안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초기 비용만 수백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중소손보사의 역대급 당기순이익이 1000억원 선임을 감안하면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고, 중소보험사는 사실상 종지업 진출이 어렵다”면서 “과거 보험사의 마이데이터 사업과 마찬가지로 유행처럼 번지는 데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보험사 통장’ 개설 명분에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각 사별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간소화하고

있다. 올해도 보험업권이 디지털 전환에 몰두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은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또한 계좌 연동을 통해 자동납부 할 수 있어 보험사 통장의 필요성이 낮아진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에 종지업라이선스를 주면 보험사 규모별로 양극화를 예상하고 있다. 대형보험사가 선제적으로 도입하면 중소손보사들 또한 무리해서라도 따라가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통장을 만들어봤자 소비자,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한정될 것”이라며 “직원들 월급통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예금보험 3.0 통해 미래금융 대응… 보호 한도·대상 확대”

유재훈 예보 사장 간담회

취임 100일 맞아… 미래비전 제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법제화 최선”

“금융사고 이후 대응에만 집중하는 예금보험 제도로는 미래의 금융 리스크에 대처할 수 없다. 예금보험 3.0으로 미래의 금융환경에 대응해 나가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예금보험 1.0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통해 부실을 정리한 기간, 예금보험 2.0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예보기금 내 은행·증권·보험 타회사 계정을 통해 구조조정비용을 차입한 기간이다.

유 사장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면 공적자금이나 타 회사 계정을 통해 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기책임이 덜했다”며 “예금보험 3.0을 통해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위기 이후보다 이전에 예방



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은 ▲예보제도기능 고도화 ▲금융상품 보호범위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예보제도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고,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한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은행의 위험투자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해 위험 추구 행위를 억제하는 제도다.

유 사장은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올리기 위해선 해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예금된 금융자산의 크

기를 통해 정할 수 있지만,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사실상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재계산되어야 한다”며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 적당한 예금보험한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외부용역과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8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보호범위도 확대한다.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지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이 예금보호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보금융회사 파산시 유가증권 손실보호와 불완전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예보가 보호하는 예금은 2010년 1161조원에서 2884조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금융투자업체 자산도 같은 기간 947조원에서 2794조원으로 약 3배 늘었다. 원금보장의 틀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와 예보아카데미 등을 통해 예보만의 차별화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유 사장은 올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법제화에 노력한다. 그는 “현재 금융안정경제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금융시장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상환기금과 저축은행특별계정의 종료가 각각 2026~2027년에 이뤄지는 만큼 잔여재산 배분방안도 모색한다. 연금저축이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을 확대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검사·조사 제도를 운영한다. 위법·위규사항 점검이 추가되는 금융감독기구와 달리 그간 축적된 공동검사, 단독검사를 통해 예보 고유의 조사 관점과 기법을 구축한다.

유 사장은 “이밖에도 서울보증 등 잔여자산을 차질없이 매각하고, MG손보 등에 대한 정리절차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갑보디아 은닉자산을 회수하는 한편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추적·회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Sh수협은행

2000억 규모 유상증자 완료

금융지주사 전환 위한 자금확보

Sh수협은행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금확보에 나섰다.

Sh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의 출자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에 따라 수협은행의 총 자본비용은 기존 13.9%에서 14.6%로 개선될 예정이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와의 공적자금 상환합의서에 따라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면서 자본적정성 개선에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강신숙 수협은행 은행장은 “이번 2000억원 유상증자를 계기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기반 마련은 물론 미래대응 조직체계 구축, 전사적 디지털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해 자생력을 갖춘 강한 은행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신보-하나은행

수출입기업 금융지원 맞손

‘수출입PLUS 보증료 지원 보증’ 출시

신용보증기금은 하나은행과 손잡고 ‘수출입PLUS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수출입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 30만달러 이상 수출입 실적을 보유하고 하나은행의 신용등급이 B2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해당 기업에 최대 15억원의 보증부대출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이 출연한 보증료 지원금 20억원을 활용해 최초 2년간 연 0.5%포인트(p)의 보증료를 차감 지원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금리 감면과 수수료 우대 외에도 보증부대출 금액의 30% 이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이승용 기자 lsy2665@

이복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은행 역할 중요”

〈금감원장〉

‘지역사회-지방은행 동행’ 간담회 참석

금융당국이 최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을 예고한 데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이 부산은행을 직접 방문하며 지방은행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8일 부산광역시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사회-지방은행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산업계 대표와 상인·소상공인 등 부산·경남지역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부산은행의



이복현 금감원장이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사회-지방은행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전 상품 금리인하, 저신용 차주 기존 대출 금리 감면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높이 평

가한다”며 지역사회 동반성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 주도의 지원 대책만으로는 최근 경기침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역경제에 기반하는 지방은행이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따뜻한 금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 앞서 부산역에 위치한 ‘D-camp부산라운지’를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스타트업 청년창업자들을 격려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